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4고단89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 고 인 1.가.나. A
2.다. B
3.나.다. C 주식회사

검 사 이희진(기소), 김혜원(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세결, 담당변호사 이형곤(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4. 5. 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8,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김포시 D, 4층에 소재하는 법인으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가 공사금액 10,780,000,000원에 도급받아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외 5필지에서 시공하는 'F'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3. 5. 26. 위 'F' 현장 5층과 6층 계단 사이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남, 59세)로 하여금 콘크리트벽 표면을 매끈하게 마무리하는 작업인 '견출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곳은 하나의 축 주위를 회전하며 오르내리는 계단인 '돌음계단'으로 증축되어 있는 약 15m 높이의 장소로서, 돌음계단 주위에 높이 115cm의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견출작업을 하기 위해 약 90cm의 작업발판 위에 올라설 경우, 결국 위 안전난간은 25cm에 불과하여, 돌음 계단 중앙 개구부 아래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견출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높이의 안전난간을 설치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사람이 추락할 경우를 대비한 추락 방호망 역시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 등으로, 피해자 가 같은 날 12:45경 위 오피스텔 5층과 6층 계단 사이에 있는 작업발판 위에서 견출작업을 하



던 중 돌음계단 중앙 개구부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8:32경 목과 가슴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경영책임자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각 사업장에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고, ④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⑤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경영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① 돌음계단 특성상 중앙 개구부로 근로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안전대 미지급 및 방호조치 미흡상태가 방치되어 있었고, ② 안전보건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지 평가하는 기준을 전혀 마련하지 아니하여, 안전보건책임자인 A이 돌음계단 중앙 개구부로 근로자들이 추락할 위험 등을 확인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③ 2022. 11.경부터 공사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고, ④ 종사자들로부터 돌음계단 중앙 개구부로의 추락 위험 및 방호조치 미흡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전혀 마련하지 않았으며, ⑤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 지급 및 방호조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아니하여 언제든지 돌음계단 중앙 개구부로 근로자들이 추락하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급박한 위험이 있음에도, 작업 중지,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전혀 마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종사자 G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3. C 주식회사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G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 G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안전사고 발생보고(추락), 감정서, 부검감정서, 재해조사의견서, 사업자등록증, 등기 사항전부증명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중대산업재해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형법 제4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의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경우 두 차례, 피고인 B의 경우 한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가 경영하는 피고인 C 주식회사의 경우 18차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사건의 양형사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A, B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김남일 _____